

미취학자녀를 둔 남성근로자의 일가정양립지원 정책에 대한 태도: 지지도와 참여의향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중심으로*

김유리** · 김은정***

일가정양립지원 정책을 지지하고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남성들과 그렇지 않은 남성들 간에는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는가? 본 연구는 현재까지의 연구들이 이러한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실증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 하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일가정양립지원 정책에 대한 지지도와 참여의향을 기준으로 기혼남성을 구분(적극지지·적극참여, 적극지지·소극참여, 소극지지·적극참여, 소극지지·소극참여 집단)하고 집단 간 차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소극지지·소극참여 집단을 기준으로 기혼남성의 정책태도별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지지·적극참여형'과 '소극지지·소극참여형'은 휴가급여의 적정 소득대체율 수준 인식에서 가장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적극지지·적극참여형은 적정 소득대체율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성역할태도도 더 진보적이고 부모역할갈등도 더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적극지지·소극참여형'과 '소극지지·소극참여형'은 배우자의 맞벌이 여부와 직무몰입도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배우자가 맞벌이를 하거나 직무몰입도가 높으면 '적극지지·소극참여형'에 속할 가능성이 상당히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셋째, '소극지지·적극참여형'과 '소극지지·소극참여형'간에는 본 연구가 고려한 개인적, 가족적, 직무환경적 요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주제어: 기혼 남성, 일가정양립지원 정책, 정책지지도, 정책참여의향

I. 문제제기

여성의 과잉노동 문제가 가부장적 성역할분담이나 성차별적 노동시장구조와 어떻게 연관되고 있는가,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정책적 개입은 어떻게 이루어져야만 하는가는

* 본 논문은 한국연구재단 2014년도 SSK 사업 연구과제(NRF-2014S1A3A2044594)의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 주저자, 부경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jerrykyr@naver.com)

*** 교신저자, 부경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ejkim@pknu.ac.kr)

여성학을 포함한 사회과학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던져왔던 질문이다. 남성과의 평등한 가족역할 부담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으로 제시되어 왔지만 이를 위한 정책적 개입은 오랜 기간 더디고 지지부진하게 진행되어 왔다. 현실적으로 기혼여성의 노동과부하가 시급히 해결해야만 하는 정책적 과제로 급부상한 것은 2000년대 이후 심각한 수준으로 낮아진 출산율 때문이었다. 출산율 제고가 절대절명의 국가적 정책과제가 되면서, 기혼여성의 노동부담 감소의 일환으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과 정책들이 지난 십여년간 쏟아져 나온 것이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은 가족외부에서 서비스를 지원하여 가족원의 가족돌봄의 부담을 완화해주는 ‘탈가족화’ 방식도 있고 가족원 스스로 직접 가족돌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족화’ 방식도 있다. 개별 가족들의 가족돌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가 서비스를 직접 지원하거나 시장서비스 구매를 보조하는 탈가족화 방식은 최근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박미옥, 2010). 기혼여성에게 부과되는 가족돌봄의 부담을 국가나 시장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혼여성의 이중노동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식이다. 이러한 접근은 가족 내의 성역할분담이나 노동시장의 재구조화와 같은 정책적 난제를 풀지 않고서도 일정수준 가족 돌봄에 대한 여성의 노동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 하지만 탈가족화 일변도로 일가정양립 지원이 이루어지면 가족관계의 부재나 가족생활의 공동화 위험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는 정책접근이 필요해진다.

필요한 가족돌봄을 가족구성원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족화’ 방식은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가족단위의 건강성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가족화 정책은 한 가족이 자녀를 출산하면 가족관계를 양육에 맞추어 조율할 수 있도록 가족 외부의 사회환경-대표적으로 노동시장-이 가족친화성을 갖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남녀 노동자 모두의 일가정양립 가능성을 증시하는 유럽의 복지선진국에서도 노동시장을 가족친화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후기 산업사회를 살아가는 대다수 가족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본다(신윤정·이지혜, 2010; 윤홍식 외, 2012). 가족생활이 노동시장의 요구에 맞춰져야 한다는 것을 가정했던 20세기의 노동친화적 가족구조화 방식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가족원이 스스로 가족돌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족화 정책은 정책참여가 기혼남녀 모두에게 자발적이고 평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가족화 정책이 기혼 여성에게 불리하게 부과되는 가족돌봄 의무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정 성(性)이 가족원 돌봄 의무를 짊어지도록 하는 방식이 아니라, 가족체계 전체가 가족돌봄에 적합하도록 재구조화 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주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혼 남성이 가족돌봄에 참여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하다. 기혼 남성의 가족돌봄 참여를 증진하려는 정책적 노력은 남성 개인의 성

역할태도 변화만 아니라 노동시장을 포함한 사회전반의 가부장적 구조의 변화와 맞물려야 하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과업이지만, 상호연결된 정책목표인 출산율 제고, 일과 가정의 양립, 가족생활의 질 향상을 선순환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포기할 수 없는 정책적 과제가 된다.

그렇다면 과연 현재의 일가정양립지원 정책은 기혼 남성의 가족돌봄 참여를 적절히 유도하고 있는가? 일가정양립지원 정책을 지지하고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남성들과 그렇지 않은 남성들 간에는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는가? 일가정양립지원 정책이 기혼 남성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달리 접근해야만 하는가? 본 연구는 현재까지 일가정양립지원 정책을 다룬 선행연구들이 이러한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실증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 하에서 출발하였다.

일가정양립지원 정책이 크게 확대되어 왔고 이러한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연구도 진행되어 왔으나 대부분의 연구들에서는 정책대상을 기혼여성으로 한정하였다(김미주, 2006; 김진욱, 2008; 손제희·김은정, 2014; 이승미 외, 2014). 현재의 일가정양립지원 정책 대부분은 기혼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동등한 정책대상으로 상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에 대한 태도나 활용도 조사에서 기혼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소수이다. 지금까지 남성을 일가정양립지원 정책의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들(안미숙·이영수, 2003; 이영석 외, 2008; 문미경 외, 2014)은 육아휴직정책을 중심으로 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현실적 이용가능성, 그리고 관련요인을 파악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특정 정책에 대한 태도나 이용의향은 정책대상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기혼 남성들은 가족원돌봄을 지원하는 정책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은 높게 인식(이숙현, 2001; 이영석 외, 2008)하는 반면 실질적인 정책참여율¹⁾은 낮은 편이다. 정책참여 경험은 추후 참여 가능성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촉발요인이며, 특히 기혼 남성의 경우 가족돌봄 참여 경험은 이들의 가족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 증진에 크게 기여한다는 사실(고용노동부, 2015b)에 비추어 볼 때, 기혼 남성의 가족돌봄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 개입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혼 남성들이 이러한 정책들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이들의 정책 지지도나 이용의향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혼 남성의 일가정양립지원 정책 참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선행요인으로서 이들의 정책태도가 어떠한지를 심도 있게 분석한 연구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기혼 남성들이 가족돌봄에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일가정양립지원 정책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지를 정책에 대한 지지도와 참여의향으로 구분하고 이를 기준으로

1) 2013년 기준 육아휴직 사용자는 전체 6만 9천명을 넘고 있으나 이 중에서 여성 사용자가 6만 7천여명이고 남성 사용자는 2천 3백여명 수준에 불과하다. 즉, 육아휴직자 전체 중 3% 정도만이 남성이 사용하였으며, 이는 2003년 1.5% 수준에서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하여 왔다고 하지만 여전히 소수에 불과하다(통계청 홈페이지, 2015).

기혼 남성 집단을 구분하여 집단 간 차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혼 남성들이 일가정양립지원 정책에 실질적으로 더 많이 참여 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이라고 본다.

II. 선행연구 고찰

1. 가족돌봄 참여방식의 일가정양립지원 정책 현황과 특성

본 연구는 일가정양립지원 정책 중에서 정책 대상자에게 가족돌봄의 시간을 지원하여 스스로 가족원을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족돌봄지원 정책에 초점을 맞추었다.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가족돌봄지원 정책으로는 출산전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근무유연제도 등이 있다. 출산전후휴가를 제외한 모든 정책들은 남성들도 이용 가능하다. 가족돌봄지원 정책의 현황과 특성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²⁾

배우자출산휴가는 배우자 출산 시 일정기간 동안 휴가를 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모성 뿐 아니라 부성을 인정해주어 아버지가 출산에 함께 참여하도록 지원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현재 휴가 기간은 3~5일이며, 이 중에 최초 3일은 유급휴가로 제공된다. 휴가급여의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며 정책대상이 사업주에게 휴가를 청구하여야 이용할 수 있다. 2014년 한국노총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500인 이상의 사업장 종사자 중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한 남성의 비율은 60%도 되지 않았다. 휴가를 신청하지 않은 주된 이유로는 휴가기간 동안의 대체인력 부재와 휴가사용에 대한 조직의 부정적 분위기였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 2014).

육아휴직은 만 8세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양육을 위해 최대 1년까지 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육아휴직의 급여는 통상임금의 40%이며(하한액 50만원, 상한액 100만원), 급여의 15%는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에만 지급된다. 2014년 10월부터는 ‘아빠의 달’인센티브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부부가 육아휴직을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 사용자의 최초 1개월 급여를 통상 임금의 100% (상한선 150만원)로 상향하여 지원하는 것이다(기획재정부, 2014).

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인증제도 등을 활용하여 남성도 육아휴직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지만(여성가족부, 2013) 여전히 전체 육아휴직자의 3% 정도만이 기혼 남성이어서 남성의 실질적인 제도 참여율은 매우 낮다. 한편 가족돌봄휴직은 자녀뿐만 아니라 부모

2) 아래 제도들의 개념 정의 및 현황은 법제처(www.moleg.go.kr), 고용노동부(www.moel.go.kr), 통계청(www.kostat.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였다.

나 배우자 혹은 배우자의 부모와 같은 가족원을 돌보기 위해 신청할 수 있는 휴직제도이다. 가족원이 질병이나 사고, 노령 등으로 돌봄이 필요할 경우 1년에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근무유연제도는 근로자들이 개인의 여건과 욕구에 따라 출퇴근 시간과 장소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근무시간, 근무방식, 근무장소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근무유연 방식이 있다. 근무유연제 활용율이 높은 유럽의 국가들에서는 이 제도가 특히 육아기 부모들에게 시간사용의 융통성을 제공하여 가족돌봄 참여를 높이는 것으로 보고된다(하세정, 2006). 국내에서는 이러한 근무유연제도가 남녀근로자 모두에게 많이 활용되고 있지 못한 편이다. 특히 남성의 경우 제도활용율이 10%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여성과 비교하여 가능한 근무 시간의 손실 없이 근무방식이나 장소를 조절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통계청, 2013).

2. 일가정양립지원 정책에 대한 태도 및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1) 정책에 대한 태도

정책에 대한 태도는 정책참여나 이를 통한 정책효과 증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 선행요인이다(Delli Carpini and Keeter, 1996). 일반적으로 “태도(attitude)”는 특정 대상에 대해 가지는 옳고 그름 혹은 호의적 비호의적인 평가를 말한다. 태도와 “행동(behavior)”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태도와 행동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김재휘, 2013:44). 합리적 행동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에 따르면 특정 행위에 대한 태도는 그 행위의 실행을 예측하는데 가장 중요한 영향요인이 된다(Fishbein and Ajzen, 1975). 즉, 개인의 행위 의도에 따라서 행동이 실현되는데, 행위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이 태도와 주관적 규범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가정에 따르면 기혼 남성의 일가정양립지원 정책에 대한 태도는 가족돌봄지원 정책에 대한 직접적 참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행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정책에 대한 태도는 정책에 참여하는 행동을 취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그 정책에 대한 지지여부와 같은 인지적 평가와 감정적 선호나 참여의향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노원·문상호, 2010; 이수범·김남이, 2013; Fishkin, 1991). 정책에 대한 태도를 구성하는 이러한 다양한 차원들 중에서 본 연구는 일가정양립지원 정책에 대한 “지지정도”와 정책을 “이용(참여)하고자 하는 의향”에 초점을 두고 정책태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두 가지 태도 요인은 상호관련되며 직접적인 정책참여 실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요인이기 때문이다. 실질적인 정책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의 정책태도에 대한 개

입이 모두 요구된다.

일반적으로는 인지적 평가 차원의 정책지지도와 정서적 성향 차원의 참여의향은 상호 긴밀한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간주된다. 즉, 특정 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높으면 이러한 정책에 대한 참여의향도 높아질 것으로 보는 것이다.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일가정양립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의향을 조사한 선행연구(김은정, 2013)에 따르면 정책인지도와 이용의향 간 차이는 근소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일가정양립지원 정책태도를 다룬 많은 선행연구(이규용 외, 2004; 이나영, 2007; 양문희·배정근, 2009)에서는 이용의향이나 정책 수용도(중요도) 중 하나를 조사하여 정책에 대한 호의적 혹은 비호의적 태도를 보여주는 측정변수로 활용해 온 경향이 있다.

그런데 일가정양립지원 정책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선행연구(김유리 외, 2015)에 따르면 기혼남성의 경우 정책지지도와 참여의향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기혼남성들은 가족돌봄참여를 지원하는 일가정양립지원 정책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은 높게 인식하고 있는 반면 참여할 의향은 이보다 낮은 것이다. 남녀를 비교하여 일가정양립지원 정책의 인지도와 참여율을 비교한 다른 선행연구(안미숙·이영수, 2003)에서도 여성에 비해 남성에게서 두 가지 측정지표 간 차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처럼 남성의 경우 일가정양립지원 정책에 대한 지지정도와 참여의향 간 차이가 크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여성 근로자에 비해 남성 근로자의 정책 지지도와 참여의향 간 격차가 더 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정책태도를 구성하는 핵심요소인 지지도와 참여의향이 어떠한 유형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유형화와 관련되는 변수는 무엇인가? 이러한 연구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선행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일가정양립지원 정책을 가장 필요로 하는 미취학자녀 양육기 기혼 남성을 대상으로 이러한 정책태도의 특성을 파악하고 정책태도 유형을 결정하는 핵심변수가 무엇인지를 분석함으로써, 기혼남성의 일가정양립 정책 참여를 증진할 수 있는 방안 모색에 유용한 실증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일가정양립지원 정책태도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특정 정책에 대한 태도는 다양한 요인과 관련될 수 있다. 일가정양립지원 정책에 대한 태도를 분석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정책태도와 관련되는 요인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책대상자의 개인적 요인 중에서는 인구학적 요인으로서 연령이나 교육수준이 정책태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김태홍·김난주, 2003; 김미주, 2006; 이영석 외, 2008). 대체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30대에서 일가정양립지원 정책에 대한 이용의향이 높거나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지만, 선행연구의 결과가 일관

적이지는 않다.

정책대상의 성역할태도도 일가정양립지원 정책에 대한 태도와 밀접히 관련되는 요인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성역할태도는 가족돌봄의 주 역할자에 대한 규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돌봄참여의향이나 이를 지원하는 정책에 대한 지지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김영미, 2012; 류연규·김영미, 2012; 김사현, 2014; Stickney and Konard, 2012).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념적인 요소로서 성역할태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적 상황에 대한 평가와 정책 급여수준도 일가정양립지원 정책에 대한 태도와 관련되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족돌봄 휴가제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혼 남성의 80% 이상이 휴가제도 이용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선행연구(안미숙·이영수, 2003)에 따르면, 이용의향이 낮은 가장 큰 이유가 휴가급여의 소득대체율이 너무 낮은 것이었다. 국외의 경우도 이러한 경향은 유사해서, 기혼 남성들이 가족돌봄을 위한 휴가제도를 이용하는 비율이나 이용기간은 휴가급여의 소득 대체율 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Smith, 2001).

정책대상자가 처한 가족상황 또한 일가정양립지원 정책에 대한 태도와 밀접히 관련된다. 선행연구들은 막내자녀 연령, 자녀돌봄 외부지원여부, 배우자직업, 부모역할갈등과 같은 가족상황이 정책태도와 관련된다고 보고하였다. 기혼 여성과 남성 모두 막내자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일가정양립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높게 평가하고, 정책이용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혜영 외, 2008; 장수정 외, 2009). 반면 가정 내 돌봄지원자가 있을 경우, 즉 배우자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거나 친인척, 이웃 등이 자녀돌봄을 지원해줄 수 있는 경우에는 기혼 남성의 일가정양립지원 정책에 대한 이용의향이 낮아졌다(이영석 외, 2008). 한편 부모역할갈등은 일가정양립의 어려움 정도와 강력한 정적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도금혜 외, 2012), 일가정양립지원 정책에 대한 태도와도 관련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일가정양립지원 정책에 대한 태도는 노동환경과도 밀접히 관련될 수밖에 없다. 선행연구들(이재경·장미혜, 2004; 이영석 외, 2008; 김현옥·유태용, 2009; 황혜원·신정미, 2009; Leria, 2000)에 따르면 직장근속기간이나 월평균임금과 같은 객관적인 요인과 직무몰입도와 같은 주관적 근로지향성 등이 가정 내 역할분담이나 정책에 대한 태도와 관련이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연구의 결과가 일관적이지는 않으나 다양한 직간접적 경로를 통해 일가정양립지원 정책에 대한 태도와 관련을 맺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가족돌봄을 지원하는 일가정양립지원 정책에 대한 태도는 정책대상의 개인적인 특성이나 가족상황적 특성, 그리고 노동환경 등과 밀접히 관련될 수 있다. 일가정양립지원 정책의 대상으로 기혼 남성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향후에도 그러한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기혼 남성을 대상으로 정책태도를 체계적으로 파악한 연구는 거의 없다. 기혼 남성의 정책

태도를 다룬 소수의 연구들도 정책지지도나 참여의향을 구분하지 않고, 이를 정책태도범주에서 동일하게 간주하였다. 본 연구는 기혼 남성이 일가정양립지원 정책에 대해 갖는 태도는 지지도와 참여의향 측면에서 차별성이 있다고 보고, 이러한 차이에 주목하여 정책집단을 구분하고 집단 간 차이를 파악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조사대상자는 미취학 아동을 둔 455명의 기혼 남성 근로자이다. 본 연구는 남성 정규직 근로자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³⁾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일가정양립지원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성과 이용가능성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육아휴직을 포함한 일가정양립지원 정책 급여의 대부분은 고용보험제도에 기반하고 있는데,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95% 수준인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가입률이 공식적으로 대략 60%선(통계청 홈페이지, 2015)이라고 보고되나 실질적인 사각지대를 고려하면 가입률은 상당히 낮을 것으로 본다. 상당수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가족돌봄을 위한 휴가나 근무용통제도 등과 같은 일가정양립지원 정책에 대한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다. 정책에 대한 지지도와 함께 실질적 참여의향을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을 고려할 때, 정규직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측정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더 명확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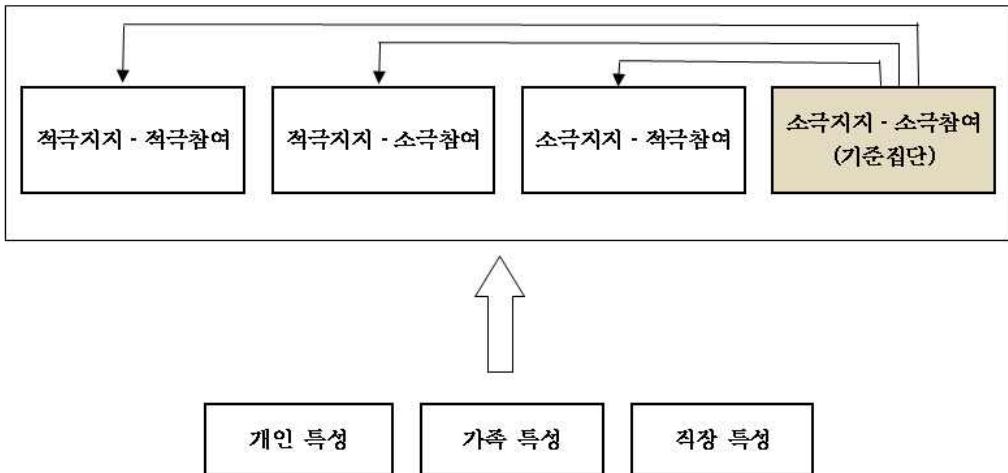
설문조사는 2014년 12월~2015년 1월까지 On-Line을 통해 진행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정책태도(지지정도와 참여의향)는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descriptive statistics)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응답자의 주요 특성(개인, 가족, 직장)과 집단 간 평균차이 분석은 일원분산분석(ANOVA), 교차분석과 카이스퀘어(χ^2) 검정을 활용하여 실시하였다. 정책태도에 있어서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⁴⁾

3) 2014년 기준 남성 임금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은 26.6% 정도로 임금근로자 약 4명 중 1명은 비정규직이다(통계청 홈페이지, 2015).

4)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k개 범주의 종속변수에서 k-1개의 로지스틱 회귀식을 추정하여 특정 범주에 속할 확률을 계산한다. 즉, 기준범주를 지정하여 기준범주와 대비하여 다른 특정 범주를 선택할 확률을 계산하는 것이다(홍세희, 2005). 본 연구에서는 정책태도별 집단 간 차이를 파악함에 있어서 정

〈그림 1〉은 본 연구의 모형을 보여준다. 소극지지·소극참여형 집단을 기준집단으로 이 집단과 다른 집단을 구분하는 핵심적 변수는 무엇인지, 기혼 남성의 개인특성, 가족특성, 직장 특성 변수를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그림 1〉 연구 모형



2. 변수측정

1) 조사대상자의 주요 특성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주요 특성을 크게 개인 특성, 가족 특성, 직장 특성으로 구분하였다. 개인 특성 중 연령은 연속변수로 측정하였으며, 교육수준은 2년제 전문대학졸업 이하와 4년제 대학졸업 이상의 2개의 범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성역할태도는 Kulik(1999)의 연구를 기초로 강기연(2000)이 개발한 '일과 가정 역할에 대한 성역할태도' 척도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7개 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응답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척도로 구성하여 척도의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성역할태도가 진보적일수록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성역할태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66이었다. 휴가급여의 소득대체율은 이상적인 소득대체율 수준과 정책참여를 위한 최소 수준 값을 합산하였다. 통상임금의 20% 수준(1점)에서 통상임금의 100% 수준(5점)까지의 5개 범주로 측정하였으며

책지지도와 참여의향이 모두 낮은 집단(기준범주)과 비교하여, 정책지지도와 참여의향에 차이가 있는 집단들이 각기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실질적인 정책참여 증진을 위한 함의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에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최소 2점에서 최대 10점까지의 변수 값을 갖는다. 점수가 높을수록 원하는 휴가급여의 소득 대체율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가족 특성으로는 막내자녀 연령, 자녀돌봄 외부지원 여부, 배우자직업 유무, 부모역할갈등을 고려하였다. 막내자녀 연령은 연속변수로 측정하였다. 자녀돌봄 외부지원 여부와 배우자직업 유무는 각각 '없음'과 '있음'의 2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부모역할갈등은 Seo(1998)의 측정지표를 손제희와 김은정(2014)이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부모역할갈등의 응답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역할갈등이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9이었다.

마지막으로 직장 특성으로는 근속기간, 월평균임금, 직무몰입도를 포함하였다. 근속기간과 월평균임금은 연속변수로 측정하였다. 직무몰입도는 Mowday 외(1979)의 조직몰입 척도(Organizational Commitment Questionnaire)를 구혜진(2002)이 변안하여 사용한 12개 문항을 활용하였다. 응답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정문항은 역점수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직무몰입도의 합산점수가 높을수록 응답자의 직장 내 직무몰입이 높음을 의미하며,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3이었다.

2) 일가정양립지원 정책에 대한 태도 측정: 지지정도와 참여의향에 따른 집단 구분

본 연구에서는 일가정양립지원 정책에 대한 지지정도와 참여의향에 따라 기혼 남성을 4개의 집단으로 나누고 각 집단별 차이를 파악하였다. 일가정양립지원 정책에 대한 지지정도는 배우자출산휴가제도, 육아휴직제도, 가족돌봄휴직제도, 근무유연제도, 남성육아휴직할당제도) 각각에 대해 이러한 정책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보는지, 그 지지정도를 질문하여 측정하였다. 응답 범주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1점)에서 매우 중요하다(5점)까지의 5개 범주로서,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일가정양립지원 정책을 지지하는 정도가 높다. 일가정양립지원 정책 참여의향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 배우자출산휴가제도, 육아휴직제도, 가족돌봄휴직제도, 근무유연제도 각각에 대해 이러한 제도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를 질문하여 측정하였다. 응답범

5) 남성육아휴직할당제도는 현재 국내에서는 시행되고 있지 않지만 북유럽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2014년 10월부터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하는 아빠의 달은 남성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가 아닌 한 가구 내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다. 하지만 국외에서 시행되고 있는 남성육아휴직할당제도는 남성에게 부여하는 휴가제도이며 휴가급여의 소득대체율은 70~80%로 국내보다 월등히 높다(이삼식·최효진, 2010). 이러한 남성육아휴직할당제도 역시 일가정양립지원 정책의 주요한 정책 중의 하나라고 보고 본 연구에서 지지정도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는데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주는 ‘참여의향 없음(1점)’과 ‘참여의향 있음(2점)’ 2개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책 참여의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가정양립지원 정책 지지도와 참여의향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4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였는데, 지지도와 참여의향 평균값(각각 20.1점, 6.9점)을 기준으로 하여 평균이상 집단을 적극집단, 평균이하 집단을 소극집단으로 나누었다. 구분된 4개의 집단은 적극지지·적극참여형, 적극지지·소극참여형, 소극지지·적극참여형, 소극지지·소극참여형이다. 첫째, 적극지지·적극참여형은 일가정양립지원 정책에 대한 지지수준이 높으며 참여의향도 높은 집단이다. 둘째, 적극지지·소극참여형은 정책 지지수준은 높지만 참여의향은 낮은 집단이다. 셋째, 소극지지·적극참여형은 정책 지지 수준은 낮지만 참여의향은 높은 집단이다. 넷째, 소극지지·소극참여형은 정책지지 수준도 낮고 참여의향도 낮은 집단이다. <표 1>은 일가정양립지원 정책의 지지정도와 참여의향에 따른 집단 분류의 결과를 보여준다.

〈표 1〉 일가정양립지원 정책의 지지정도와 참여의향에 따른 집단 분류

구분		정책 지지정도	
		높음	낮음
정책 참여의향	높음	적극지지·적극참여형	소극지지·적극참여형
	낮음	적극지지·소극참여형	소극지지·소극참여형

IV. 분석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아래 <표 2>와 같다. 먼저 조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39세이며 교육수준은 4년제 대학졸업 이상이 80%로 대부분이 대졸이상이다. 성역할태도는 평균 22.34점(총 35점)으로 중간이상의 진보적 태도를 보였다. 휴가급여의 소득대체율은 평균적으로 통상임금의 약 60% 이상이라고 보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조사대상자의 막내자녀 평균 연령은 4세이며, 본인이나 배우자 이외의 외부에서 자녀돌봄을 지원해주는 존재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85%로 높은 편이었다. 대부분의 응답자가 보육시설 이용 후 귀가한 자녀를 돌보아 줄 부부 외 다른 인적 네트워크가 부족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의 직업은 ‘없다’는 응답이 약 52%였으며, 부모역할갈등은 평균 28.29점(총 40점)으로 중간이상의 갈등수준을 나타내고 있었다.

조사대상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7년 9개월 정도였으며, 이들의 월평균임금은 400만원의 수준으로 2013년 기준 평균 42세 남성 임금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인 약 300만원보다 높다(고용노동부, 2015a). 이는 본 연구가 정규직만을 조사대상자로 하였기 때문에 평균 임금수준이 다소 높은 편이다. 직무몰입도는 평균 38.84점(60점)으로 중간 이상의 몰입도를 보이고 있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455)

변수		빈도(명)/평균	비율(%)/표준편차	
개인 특성	연령	39.34	3.80	
	교육수준	전문대졸이하	87	19.10
		4년대졸이상	368	80.90
	성역할태도	22.34	2.78	
	휴가급여 소득대체율	6.67	1.75	
가족 특성	막내자녀 연령	4.39	1.82	
	자녀돌봄 외부지원	없음	385	84.60
		있음	70	15.40
	배우자직업	없음	236	52.30
		있음	215	47.70
부모역할갈등	28.29	5.41		
직장 특성	근속기간	7.87	4.76	
	월평균임금	411.40	238.70	
	직무몰입도	38.84	5.71	

〈표 3〉은 일가정양립지원 정책 중 가족돌봄지원 정책에 대한 지지정도와 참여의향에 따라 집단화한 4개 유형의 주요 특성을 보여준다. 정책지지도도 높고 참여의향도 높은 집단인 적극지지·적극참여형이 가장 많았으며 조사대상자의 45%가 여기에 해당하였다. 다음이 정책지지도는 낮으나 참여의향은 높은 수준인 소극지지·적극참여형이었는데, 약 24%의 기혼남성이 이 집단에 속하였다. 정책지지도도 낮고 참여의향도 낮은 유형(소극지지·소극참여)은 약 17%였으며, 정책지지도는 높으나 참여의향은 낮은 유형(적극지지·소극참여)은 약 14%였다.

4가지 집단유형별 특성을 보면 적극지지·적극참여형이 정책지지정도와 참여의향이 가장 높다. 적극지지·소극참여형은 지지수준이 적극지지·적극참여형보다는 낮고 참여의향은 소극지지·소극참여형과 유사하다. 소극지지·적극참여형은 지지수준이 소극지지·소극참여형보다는 높고, 참여의향은 적극지지·적극참여형보다 낮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정책에 대한 지지정도와 참여의향은 각기 다른 차원의 정책태도를 보여주는 것 하지만 일정 정도 경향성이 상호연관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정책지지도가 높으면서 참여의향이 높은 집

단의 참여의향이 정책지지도가 낮지만 참여의향이 높은 집단의 참여의향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정책에 대한 지지정도가 높은 낮은 참여의향이 소극적인 집단은 참여의향의 수준에서 차이가 없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참여의향은 정책지지도와 관련 없이 다른 환경요인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일 수도 있다. 다음 장의 다항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통해 정책태도에 대한 영향요인을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3〉 일가정양립지원 정책에 대한 지지정도와 참여의향 별 집단유형

구분		지지정도		참여의향	
		평균 (표준편차)	최소 / 최대	평균 (표준편차)	최소 / 최대
집단유형	전체(%)	20.12(3.28)	9 / 25	6.93(1.35)	4 / 8
적극지지·적극참여형	205(45.10)	22.48(1.80)	20 / 25	7.82(.39)	7 / 8
적극지지·소극참여형	65(14.30)	21.78(1.89)	20 / 25	5.22(.84)	4 / 6
소극지지·적극참여형	107(23.50)	17.24(1.70)	12 / 19	7.59(.49)	7 / 8
소극지지·소극참여형	78(17.10)	16.50(2.39)	9 / 19	5.09(.87)	4 / 6

2. 정책태도 집단별 일반적 특성의 차이분석 결과

〈표 4〉는 일가정양립지원 정책의 지지정도와 참여의향 수준에 따른 집단들 간에 일반적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가족돌봄 참여를 지원하는 일가정양립지원 정책에 대한 적극지지·적극참여형 집단은 (참여의 적극성여부와 관련 없이) 소극적인 지지도를 보이는 두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진보적인 성역할태도를 갖고 있는 집단이다. 휴가급여의 소득대체율 수준도 정책태도에 따른 4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적극지지·적극참여형 집단은 소극적인 지지도를 보이는 두 집단보다 적절한 휴가급여의 소득대체율 수준을 높게 잡았다. 그러나 소극적인 참여의향을 보이는 두 집단 간에도 적정 소득대체율 수준은 차이를 보였다. 적극지지집단이 소극지지집단보다 적정 소득대체율을 높게 설정하였다. 정책참여의향이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지지정도에 따라 적정 휴가급여수준에 대한 태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책태도에 따른 4개의 집단별로 자녀돌봄 외부지원 여부와 배우자직업 유무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소극지지·소극참여형 집단이 자녀를 돌봐줄 친지, 이웃이 없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적극지지·적극참여형 집단이 네 집단 중에서는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배우자 직업에서는 적극지지·소극참여형 집단 기혼남성의 배우자가 전업주부인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소극지지·적극참여형 집단 기혼남성의 배우자는 취업주부 비율이 가장 높아 대조

를 보였다. 한편 적극지지·적극참여형 집단에서 부모역할갈등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소극지지·소극참여를 보인 집단보다 지지정도와 참여의향이 모두 적극적인 집단에서 갈등수준이 유의미하게 높다. 기혼 남성의 직장관련 특성 중에서는 직무몰입도가 정책태도에 따른 4개 집단별로 차이가 있다. 적극지지·소극참여형 집단 남성의 직무몰입도가 가장 높은 반면 소극지지·적극참여형 집단의 몰입도가 가장 낮다.

〈표 4〉 정책태도 집단별 일반적 특성의 차이

변수	평균(표준편차) 빈도(%)				x ² /F	사후 검증	
	적극지지· 적극참여형 (a)	적극지지· 소극참여형 (b)	소극지지· 적극참여형 (c)	소극지지· 소극참여형 (d)			
개인 특성	연령	39.09(3.91)	39.80(3.50)	39.25(3.73)	39.73(3.81)	.91	
	교육수준 /전문대졸이하/	40(19.50)	10(15.40)	21(19.60)	16(20.50)	.72	
	성역할태도	22.89(3.03)	22.58(2.94)	21.66(2.27)	21.60(2.25)	7.02***	a)c a)d
	휴가급여 소득대체율	7.03(1.45)	6.86(1.68)	6.35(1.89)	5.99(2.07)	8.82***	a)c a)d b)d
가족 특성	막내자녀연령	4.18(1.88)	4.71(1.77)	4.50(1.75)	4.53(1.77)	1.90	
	자녀돌봄 외부지원 /없음/	163(79.50)	56(86.20)	95(88.80)	71(91.00)	8.11*	
	배우자직업 /없음/	102(50.00)	44(68.80)	49(46.70)	41(52.60)	8.71*	
	부모역할갈등	29.41(5.88)	28.03(5.79)	27.73(4.17)	26.32(4.64)	7.08***	a)d
직장 특성	근속기간	7.53(4.69)	8.27(5.65)	8.08(4.30)	8.12(4.78)	.64	
	월평균소득	414.89 (269.47)	413.29 (231.27)	391.87 (175.63)	426.56 (239.62)	.27	
	직무몰입도	38.70(6.42)	40.60(5.24)	38.14(5.04)	38.68(4.66)	2.69*	

*p< .05, ***p< .001

3. 일가정양립지원 정책태도별 집단 간 차이에 대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인 기혼남성의 일반적 특성이 종속변수인 정책태도별 (범주형) 집단 구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6) 〈표 5〉는

6) 모형 적합도 검증으로 Pearson Chi-Square와 Deviance Chi-Square를 실시하였다. deviance는 분석모형과 포화모형의 $-2\ln \mathcal{L}$ 의 차이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야 모형의 적합도가 좋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일가정양립지원 정책에 대한 태도별로 구분된 4개의 집단 간 차이가 어떤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지, 관련요인들의 영향력을 통제된 상태에서 집단구분의 결정변수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기준집단은 소극지지·소극참여형 집단이다. 아래에서는 기준집단과 비교해서 해당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어떤 변수에 의해 결정되는지, 그리고 그 영향력은 어떠한지를 분석한다.

1) 적극지지·적극참여형(VS 소극지지·소극참여형) [I 모형]

적극지지·적극참여형과 소극지지·소극참여형 간의 차이를 결정짓는 변수는 성역할태도, 휴가급여 소득대체율, 그리고 부모역할갈등이다. 소극지지·소극참여형에 비해 적극지지·적극참여형 기혼남성이 더 진보적인 성역할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휴가급여의 적정 소득대체율을 높게 책정하고 부모역할갈등을 더 많이 경험하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집단 간 차이 결정변수의 영향력은 휴가급여 소득대체율, 성역할태도, 부모역할갈등 순이다. 휴가급여의 적정 소득대체율을 20%씩 높게 책정할수록 소극지지·소극참여형 집단이 아닌 적극지지·적극참여형 집단에 속할 확률이 1.44배 증가하며, 성역할태도가 측정지표에서 1점 더 진보적일수록 적극지지·적극참여형 집단에 속할 확률이 1.24배 증가한다. 부모역할갈등 수준도 측정지표 점수가 1점 높아질수록 적극지지·적극참여형 집단에 속할 확률이 1.12배 증가한다.

2) 적극지지·소극참여형(VS 소극지지·소극참여형) [II 모형]

소극지지·소극참여형과 비교하여 적극지지·소극참여형의 주요 특성을 분석한 결과가 <표 5>의 [II모형]에 제시되어 있다. 소극지지·소극참여형과 적극지지·소극참여형의 차이를 결정짓는 변수는 성역할태도, 휴가급여 소득대체율, 배우자직업 유무, 직무몰입도이다. 소극지지·소극참여형에 비해 적극지지·소극참여형의 남성이 성역할태도가 더 진보적이고 휴가급여의 적정 소득대체율을 높게 책정하며 배우자가 취업여성일 가능성이 높고 직무몰입도가 높다.

이상의 두 집단 간 차이를 결정짓는 변수의 영향력은 배우자직업 유무, 휴가급여 소득대체율, 성역할태도, 직무몰입도 순이다. 배우자가 취업여성일 경우 소극지지·소극참여형 집단이 아닌 적극지지·소극참여형 집단에 속할 확률이 4.4배 정도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휴가급여의 적정 소득대체율 수준을 한 단계 높게 책정할수록 적극지지·소극참여형 집단에 속할 확률이 1.37배 증가하였다. 성역할태도도 한 단계 더 진보적일수록 적극지지·소극참여형 집단에

(홍세희, 2005: 128). 본 연구의 모형 검증 결과 deviance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분석모형의 적합도가 적절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속할 확률이 1.29배 증가하며, 직무몰입도가 한 단계 증가할수록 적극지지·소극참여형 집단에 속할 확률이 1.12배 증가한다.

3) 소극지지·적극참여형(VS 소극지지·소극참여형) [III 모형]

기혼 남성 중에서 일가정양립지원 정책에 대한 지지도는 낮지만 정책 참여의향은 높은 집단이 소극지지·적극참여형에 속한다. 정책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은 높게 평가하지 않지만 현실적 필요에 의해서 참여하고자 하는 의향은 일정수준 이상인 집단이다. 이 집단은 정책지지도도 높지 않고 참여의향도 높지 않은 집단과 주요 특성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II 모형의 결과와 비교하면 III 모형의 결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여준다. 정책지지도에서 차이를 보이는 적극지지·소극참여형과 기준집단(소극지지·소극참여형)과의 비교분석[II 모형]결과에서는 두 집단이 상당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 반면, 참여의향에서 차이를 보인 소극지지·적극참여형은 기준집단(소극지지·소극참여형)과 주요 변수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정책지지도가 낮은 두 집단에 속하는 기혼 남성들은 참여의향의 차이와 관련 없이 상호 유사한 개인적, 가족적, 직장관련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5〉 일가정양립지원 정책태도별 집단 간 차이에 대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기준집단: 소극지지·소극참여형)

변수	적극지지·적극참여형[I]			적극지지·소극참여형[II]			소극지지·적극참여형[III]		
	B	se	Exp (B)	B	se	Exp (B)	B	se	Exp (B)
절편	-8.4	2.91		-11.52	3.63		-7.78	3.16	
〈개인 특성〉									
연령	-.04	.05	.96	-.10	.06	.90	.01	.05	1.01
최종학력(전문대졸이하)									
4년대졸이상	.16	.43	1.18	-.54	.58	.58	-.33	.48	.72
성역할태도	.22**	.07	1.24	.25**	.08	1.29	-.01	.08	.99
휴가급여 소득대체율	.37***	.10	1.44	.32*	.12	1.37	.04	.10	1.04
〈가족 특성〉									
막내자녀연령	-.04	.09	.97	.20	.12	1.22	-.03	.10	.97
외부돌봄유무(없음)									
있음	-.29	.53	.75	-.53	.70	.59	.38	.60	1.47
배우자직업유무(없음)									

있음	.40	.36	1.49	1.69**	.50	5.44	-.11	.38	.90
부모역할갈등	.11**	.03	1.12	.07	.04	1.08	.05	.03	1.05
〈직장 특성〉									
근속기간	-.02	.04	.98	-.04	.05	.96	-.03	.04	.97
개인월평균소득	.00	.00	1.00	.00	.00	1.00	-.00	.00	1.00
직무몰입도	.02	.03	1.02	.12**	.04	1.12	-.01	.03	.99
Nagelkerke R ²				.27					
-2LL				779.99					
Chi-Square				97.46***					
자유도				33					

()은 준거변수

*p< .05, **p< .01, ***p< .001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미취학자녀를 둔 기혼남성을 대상으로 일가정양립지원 정책 중 가족돌봄지원 정책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고, 기혼남성 집단 간 정책태도의 차이를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일가정양립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도나 이용가능성, 그리고 중요성이나 이용의향 등을 분석한 선행연구(김미주, 2006; 배귀희·양건모, 2011; 이현아 외, 2012; 최숙희, 2012; 김도희, 2014; 이승미 외, 2014)들은 대체로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요인들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 변인을 파악하는 것에 그쳤다. 정책참여행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요인으로서 정책태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기혼남성들이 일가정양립지원 정책에 대해 갖는 태도는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나 지지정도와 정책 이용이나 참여의향에 간극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면밀한 실증분석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일가정양립지원 정책에 대한 지지정도와 참여의향을 기준으로 기혼남성을 4개의 집단으로 나누었다. 연구결과, 정책지지도도 높고 참여의향도 높은 집단인 적극지지·적극참여형이 가장 많았고 정책지지도는 높으나 참여의향은 낮은 유형(적극지지·소극참여)이 가장 적었다. 정책태도에서 다소간 불일치를 보이는 집단인 소극지지·적극참여형과 적극지지·소극참여형을 비교해보면, 정책지지도가 높는데 참여의향은 낮은 집단보다는 정책지지는 높지 않지만 참여의향은 높은 집단의 비율이 약 10%정도 높다. 이념적으로 일가정양립지원 정책 자체를 지지하지 않더라도 현실적으로 이러한 정책을 활용하고자 하는 의향이 높은 집단이, 정책을 지지하지만 정책 활용 의향은 낮은 집단보다는 더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

음으로 정책태도에 따라 분류된 4개의 집단 간에 일반적 특성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기혼남성의 일가정양립지원 정책에 대한 지지도는 성역할태도, 휴가급여 소득대체율의 적정 수준, 자녀돌봄 외부지원 여부와 같이 주로 기혼남성의 개인적 특성과 밀접히 관련되는 반면, 정책 참여의향은 배우자직업 유무나 직무몰입도와 같이 자녀돌봄환경이나 노동시장 특성과 관련이 있었다. 정책에 대한 지지도와 참여의향 모두와 관련 있는 요인은 부모역할갈등수준으로 갈등수준이 높으면 일가정양립지원 정책에 대한 필요성도 높게 인식하고 참여의향도 더 높았다.

미취학자녀를 둔 기혼남성의 개인적, 가족적, 직업적 특성이 일가정양립지원 정책태도별 집단구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한 결과, 두드러지는 집단 간 차이를 발견하였다. 먼저, 적극지지·적극참여형과 소극지지·소극참여형은 휴가급여의 적정 소득대체율 수준 인식에서 가장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휴가급여의 적정 소득대체율을 높게 책정한 기혼 남성은 적극지지·적극참여형에 속할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일가정양립지원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참여여부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급여의 소득대체율을 제시하였던 선행연구들과 일치한다(김태홍·김난주, 2003; 이규용 외, 2004; 장지연 외, 2004; 김미주, 2006). 미취학자녀를 둔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한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조사대상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육아휴직시 휴가급여의 인상이라는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휴가급여의 소득대체율을 통상임금의 60%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정책참여의향을 증가시키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지지·소극참여형과 소극지지·소극참여형은 배우자의 맞벌이 여부와 직무몰입도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배우자가 맞벌이를 하거나 직무몰입도가 높으면 적극지지·소극참여형에 속할 가능성이 상당히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우선 맞벌이 여부가 기혼 남성의 참여의향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오히려 참여의향이 낮은 집단 내에서 이들의 정책지지도 수준에만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는 주목할 만하다. 배우자가 맞벌이를 하는 기혼남성은 자녀양육 등에 대한 사회적 개입의 필요성은 높게 인식하지만, 본인 스스로 이러한 정책에 참여하여 자녀양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의향을 더 많이 갖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기혼 여성을 중심으로 일가정양립지원 정책 참여의향을 분석한 기존 연구(한지숙·유계숙, 2007; 장수정 외, 2009)의 결과와 유사하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막내자녀 연령이 기혼여성의 정책 참여의향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기혼남성의 정책 참여의향을 조사한 본 연구에서는 막내자녀연령이 정책 지지정도를 포함하여, 정책 참여의향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생

활시간조사에서도 맞벌이 가구에서 남성의 가사노동 시간은 41분인데 비해 여성은 3시간 13분으로 나타났으며 5년 전과 비교해보았을 때 남성은 5분 증가하고 여성은 9분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여성이 4배 이상 많다. 심지어 여성 외벌이 가정에서도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이 남성보다 1시간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5). 여전히 일가정양립을 위한 시간부족의 문제가 남성이 아닌 여성의 문제로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배우자의 맞벌이 여부가 여전히 기혼 남성의 일가정양립지원 정책에 대한 참여의향과 관련이 없고 실질적으로 기혼 남성의 가정내 자녀돌봄시간이 적은 이러한 현상은, 다른 한편 남성의 노동시장 참여의 특성과 관련해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30-40대의 자녀양육 기혼남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과 노동의 현실을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일과 가정이 동시에 중요하다고 인식은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시간사용의 우선순위는 일에 둔다는 응답이 높았는데, 결과적으로 정시퇴근을 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70%를 상향하였다(문은영 외, 2011). 2014년 현재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법정 초과근로포함)을 보아도 남성 184시간, 여성 164시간으로 월평균 20시간이상 남성의 근로시간이 긴데(고용노동부, 2014), 회식 등과 같은 비법정근로시간을 포함하면 남성의 시장노동시간은 여성보다 훨씬 길수밖에 없다.⁷⁾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기혼 남성의 직무몰입도가 높으면 가족원 돌봄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향은 높아지기 어려울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적극지지·소극참여집단은 소극지지·소극참여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직무몰입도가 높았고, 직무몰입도 변수는 일가정양립지원 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도 참여의향이 여전히 소극적인 집단에 속하게 하는 결정 변수였다. 일가정양립지원 정책인지도와 이용의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 김은정(2013)연구에서도 일지향성은 일가정양립지원정책 인지도와는 정적인 관련성을 보인 반면, 정책 이용의향과는 부적 관련성을 보여서 본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한편 소극지지·소극참여형에 비해 적극지지·소극참여형에 속할 확률은 성역할태도에 따라서도 달라졌다. 성역할태도는 적극지지·적극참여형에 속할 확률에도 영향을 미쳤지만, 실질적인 참여의향보다는 정책지지도가 다른 집단에 속할 확률에 더 영향을 미쳤다. 선행연구(김영미, 2012; 김사현, 2014)와 유사하게 성역할태도는 정책의 지지도와 같은 인지적 판단에는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참여의향과 같은 실질적인 태도 변화에 있어서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목진휴 외(2014) 연구에서도 남성과 여성 모두 성역할태도가 진보적일수록 일가정양립지원 정책을 긍정적으로는 인식하지만 성역할태도와 가정 내 돌봄 참여시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즉, 성역할태도는 정책 지지도와 같은 인지적 판단과는 관련이 되는 반면 현실에서의 실질적인 돌봄 참여수준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7) 2013년 한국 근로자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2,071시간으로 OECD평균인 1,671시간보다 400시간이 길어서 멕시코, 칠레 다음으로 3위를 기록하고 있다(헤럴드경제, 2015).

배우자의 직업 유무나 부모역할갈등 수준처럼 가정내 자녀돌봄 역할분담 상황이나 이에 대한 만족도와 관련된 변수도 정책태도를 결정짓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역할갈등이 높은 것은 일가정양립지원 정책에 대한 지지도와 참여의향 모두 높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을 유의미하게 높이는 요인이었다. 기혼 남성이 현실에서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은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미취학자녀를 양육하는 기혼 남성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일가정양립지원 정책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고 정책에 대한 지지도와 참여의향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여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일가정양립을 지원하는 정책의 대상으로 남성의 중요성이 점차 더 커지고 있는 반면, 이러한 정책들에 대한 기혼 남성의 태도를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이들의 집단간 차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전무했다는 점에서, 이를 시도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일가정양립지원 정책에 대한 접근성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 차이가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정규직 남성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라는 점에서, 연구결과를 기혼 남성근로자 전체로 일반화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비정규직 기혼 남성의 경우 일가정양립의 어려움이 정규직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 집단에 초점을 둔 정책연구가 시급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 강기연(2000). 맞벌이 부부의 공평성 인지-의사결정 참여 및 가정생활만족도-사무직, 관리·전문직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고용노동부(2014).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통계자료.
- 고용노동부(2015a).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통계자료.
- 고용노동부(2015b). 「남성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가이드북」.
- 구혜진(2002). 맞벌이 부부의 역할갈등과 부부의사소통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기획재정부(2014). 보도참고자료: 2014년 경력단절여성 통계 주요내용 분석.
- 김도희(2014). 육아휴직제도의 실효적 정착과 활성화를 위하여. 「복지동향」 10: 29-34.
- 김미주(2006). 육아휴직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한국여성학」 22: 157-195.
- 김사현(2014). 가족정책 지원유형에 따른 성역할태도 변화.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4. 10: 1010-1033.
- 김영미(2012). 복지국가의 가족정책이 성역할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비교 분석. 「한국사회보장연

- 구」 28(2): 211-241.
- 김유리·김은정·정은아(2015). 미취학자녀 양육기 남성의 일·가정양립정책에 대한 태도와 관련 요인. 「SSK-Networking 제3차 심포지엄 자료집」 32-44.
- 김은정(2013). 미취학자녀를 둔 취업여성의 일·가정양립정책 인지도와 이용의향: 시간지원정책과 서비스지원정책의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4(2): 617-642.
- 김재휘(2013). 「설득 심리 이론」.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진옥(2008).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과 근로지속성에 관한 실증연구. 「사회복지정책」 33(0): 239-260.
- 김현옥·유태용(2009). 직무관련 변인이 일-가정 갈등에 미치는 영향과 조직몰입 및 직무열의에 대한 일-가정 갈등의 효과. 「산업 및 조직」 22(2): 155-182.
- 김혜영·황정미·선보영·김동기(2008). 「남성의 부성경험과 갈등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태홍·김난주(2003). 「우리나라 모성보호제도의 실시 현황 분석과 개선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노원·문상호(2010). 출산장려 정책신뢰도가 출산태도에 미치는 영향: 가임연령(25-45) 여성표본을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0(2): 257-281.
- 도금혜·전귀연·김수경(2012).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직업관련 변인들이 부모역할 참여와 부모역할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유아보육학」 73: 443-458.
- 류연규·김영미(2012). 복지국가 젠더격차와 성역할 인식 차이에 대한 비교연구. 「사회복지정책」 39(4): 175-203.
- 목진휴·안미영·김병준(2014). 성역할 인식 및 태도가 보육서비스 정책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27(1): 151-182.
- 문미경·김복태·허태욱(2014). 「공직내 육아휴직자 및 유연근무자 인사상 차별실태 및 개선방안」.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문은영·서영주·최나리(2011). 서울시 30, 40대 자녀양육 남성근로자의 일과 가족생활 양립현황 및 문제점. 「이슈분석」 6: 1-14.
- 박미옥(2010). 저출산 시대에 한국 보육정책의 실태 분석.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0(1): 55-89.
- 배귀희, 양건모(2011). 공무원 유연근무제 정착에 관한 실증적 연구: 탄력근무, 시간제근무 및 재택근무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3: 125-153.
- 손재희·김은정(2014).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이 아동양육 취업여성의 근로지속의사에 미치는 영향: 미취학 아동양육 취업여성과 취학아동양육 취업여성 집단 비교. 「한국생활과학회지」 23(3): 421-441.
- 송혜림·고선강·박정윤·권혜진·김유경·진미정(2010). 가족친화환경 측면에서 본 남성의 아버지역할 수행 실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4(4): 341-361.
- 신윤정·이지혜(2010). 유럽 국가 육아 지원 정책의 동향 및 시사점. 「보건복지포럼」 163: 99-114.
- 안미숙·이영수(2003). 모성보호에 대한 남녀노동자의 인식 및 실태조사 - 부산지역 중심으로. 「여성연구논집」 14: 71-98.
- 양문희·배정근(2009). 재택근무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특허청 심사관 재택근무 의식 조사를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학연구」 17(2): 97-123.
- 여성가족부(2013). 가족친화 인증기준 및 가족친화지수 개선연구.

- 윤홍식·송다영·김인숙(2012). 「가족정책: 복지국가의 새로운 전망」. 공동체.
- 이규용·남재량·박혁·김은지(2004). 「육아휴직 활용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이나영(2007). 모성휴가제도의 활성화에 대한 직장인의 태도. 「보건과복지」9: 89-105.
- 이삼식·최효진(2010). 저출산시대의 일가정양립정책 국제비교: OECD 국가의 휴가휴직정책중심. 「국제 보건복지 정책동향」.
- 이수범·김남이(2013). 정책 이해도 및 관여도가 공중의 정책태도, 정보탐색과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광고홍보학회」 15(3): 220-254.
- 이숙현(2001). 전문직 남성의 아버지 역할: 교수·의사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13(1): 31-50.
- 이승미·구혜령·김선미(2014). 미취학자녀를 둔 맞벌이 여성의 육아휴직제도 이용의사에 관한 연구. 「한국자치행정정보」 28(2): 85-106.
- 이영석·박은미·허창덕(2008). 아버지의 남성육아휴직 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 「한국가족복지학」 13(1): 25-42.
- 이재경·장미혜(2004). 고용조건이 일과 가족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경제와 사회」 64: 172-208.
- 이현아·김선미·이승미(2012). 외국계기업사례분석을 통한 유연근무제활성화방안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6: 173-187.
- 장수정·송다영·김은지(2009). 일가족 양립 정도에 대한 인식: 집단간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1(2): 349-370.
- 장지연·정혜선·류임광·김수영·장은숙(2004). 「여성근로자 모성보호의 현황과 정책방안 - 모성관련 휴가제도를 중심으로」. 고용노동부.
- 최속희(2012).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 조성의 성과와 남성육아휴직 활성화. 「젠더리뷰」 27: 45-51.
- 하세정(2006). 영국 유연근로제도의 현황. 「국제노동브리프」 4(9): 76-82.
- 한국노동조합총연맹(2014). 「모성보호와 육아휴직 활용 실태조사 보고서」.
- 한지숙·유계숙(2007). 기혼근로자의 성역할태도와 일가족 지향성이 일가족 갈등/축진 및 가족친화제도 이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5): 143-166.
- 헤럴드경제(2015. 05. 01). 숫자로 보는 대한민국 근로자...최장 노동 여전, 근로자 간 격차 더 커져.
- 홍세희(2005). 「이항 및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교육과학사.
- 황혜원·신정미(2009). 자녀를 둔 맞벌이부부의 역할갈등과 삶의 질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4(1): 45-71.
- 통계청(2013). 「2013년 유연근무제 활용 현황 보도자료」.
- 통계청(2015). 「2014년 생활시간조사 결과 보도자료」.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2015). www.moel.go.kr
- 법제처 홈페이지(2015). www.moleg.go.kr
- 통계청 홈페이지(2015). www.kostat.go.kr
- Delli Carpini, M. X., and Keeter, S(1996). *What Americans know about politics and why it matters*.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Fishbein. M., Ajzen. I(1975).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 theory and research*. Reading, MA: Addison-Wesley.
- Fishkin, J. S(1991). *Democracy and deliberation: New directions for democratic reform*.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Kulik, L(1999). Marital power relations, resources and gender role ideology: A multivariate model for assessing effects.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30(2): 189-207.
- Leria, A(2000). Combining work and family: Nordic policy reforms in the 1990s. 157-174. *in gender, welfare state and the market: Towards a New Division of Labour*, edited by T. Boje and A. Leria. London: Routledge.
- Mowday, R. T., Steers, R. M., & Porter, L. W(1979). The measurement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4(2), 224-247.
- Seo, H. Y(1998). *The Relations of Work-father Role Conflict with Parent Satisfaction and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Korea.
- Smith, A(2001). Parental leave: Supporting male parenting? A Study using longitudinal data of policy variation across the European Union. Paper given at the EURESOC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in Europe, Bad Herrenalb, Germany 23-28 June 2001.
- Stickney, L. T., and Konrad, A. M(2012). Societal institutions and work and family gender-role attitudes. *Organisation Management Journal*, 9(4): 236-246.

The Attitude of the Male Workers Rearing Preschool Children on Work-Family Reconciliation Policy: Focusing on the Group Differences by Policy Supporting and Participation Intent

Kim, Yuri & Kim, Eunjeong

What are the major differences between fathers with preschool children who support and/or use the work-family reconciliation policy and those who do not? Previous studies have not drawn on valid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data to answer this question. This study seeks to answer this question by dividing male workers with preschool children into four different groups: The positive supporting and positive participating group, the positive supporting and passive participating group, the passive supporting and positive participating group, and the passive supporting and passive participating group.

Assigning the passive supporting and passive participating group as the reference group, this study analyzed the major differences between this reference group and the three other groups. First, the critical difference between the positive supporting and positive participating group and the reference group is the level of income substitution as policy benefit. Also, both gender role attitude and parent role stress level influence the likelihood of belonging to the positive supporting and positive participating group. Second, the major differences between the positive supporting and passive participating group and the reference group are whether their wives are working or not and the level of work-involvement. Male workers with working wives and with high levels of work involvement are apt to be members of the positive supporting and passive participating group rather than the reference group. Third,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passive supporting and positive participating group and reference group.

[Key Words: Male workers with preschool children, Work-family reconciliation policy, Level of policy support, Policy participation intent]